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	
	배포일시	2018. 4. 13(금) /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	혁신도시 정책총괄과	담당자	·과장 윤종수, 사무관 양종호 ·☎ (044) 201-4456, 4458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공공기관 109곳 ‘지역인재 의무채용’ 관련

-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거쳐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금년 1월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 - * 지역인재채용이 목표미달시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합격 공무원 임용시 여성·남성, 지방인재, 장애인·저소득층 우대제도에서 널리 활용
 -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채용비율도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0%로 확대해나가기 하였습니다.
-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지역인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,
 - 본 제도는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지역의 대학교 등은 인재를 양성하는 공공기관-지역대학교 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.
- 지역인재 범위는 각 공공기관이 있는 행정구역(시·도 기준)이나, 인접 시·도 간에 협의되는 경우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 - 대구·경북은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, 광주·전남은 공동혁신도시로서 지역인재 범위를 해당 시·도가 아닌 권역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.

□ 지역인재 채용은 작년 관계부처, 공공기관,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률 개정을 통하여 금년 1월말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며, 제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·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.

< 보도내용 (4.13 한국경제) >

- ◆ “지방에서 초·중·고 나왔는데...” 수도권大 학생들 반발도 커져
- ◆ “왜 충남대생이 세종 지역인재 아니냐”... 지방대생도 ‘채용할당제’ 불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양종호 사무관(☎ 044-201-445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